

동곡농협, 불법 매립 ‘사실 알고’ 거래 의혹 로컬푸드부지 ‘산업폐기물’ 수십만톤 매립

최근 본지의 보도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광산구 동곡농협의 로컬푸드 예정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 지역 내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해당 부지는 본 거래 이전인 2019년 5월경 광산구청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관련 원상 회복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곡농협은 관련 행정처분이 처리되지 않은 2020년 1월 6일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계약 당시 행정처분 상태임을 동곡농협이 인지했느냐며, 매입 후 동곡농협이 이부지에 추가 성토한 사실이 확인되어 새로운 의혹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 부지의 거래 전반에 문제가 많았다는 조합원들의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광산구청 관련 부서와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불법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본 언론의 보도와 같이 이 땅 거래의 의사결정과 업무처리 절차가 동곡농협 정관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느냐와 폐기물 매립 의혹들이다.

첫째, 동곡농협 정관상 1억 이상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총회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총회는 거래가 이루어진 2020년 1월 6일보다 한 달여 지난 2월 11일에 개최되어 절차 위반이 확실하다.

둘째로 총회 통과를 위한 의결 조건의 위반이다. 당일 총회에 참석한 재직의원수는 55명이었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8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나 찬성은 26명으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동표라는 이유로 재투표를 강행하여 본 건이 승인되었다고 선포하여 조합 대의원을

기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결 선포를 하여 계약을 밀어붙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지난 2025년 3월 중순 이루어진 조합원 보답대회에서 로컬푸드 예정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합과 이사 및 감사들은 이 건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정관상 절차 위반 여부, 의결 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합리적 거래가 책정 여부, 폐기물 매립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조치를 실행하지 않고, 되려 이건을 법적 소송을 위한 추가예산(1,000만 원)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아가 예산 400만 원을 포함 1,400만 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보다. 본질을 흐리기 위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로 보인다.

동곡농협이 해당 부지 매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에 대한 역지주장과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문제가 없었다면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이 선행 절차라 생각된다.

향후, 동곡농협의 현명한 대처를 통한 지역 내 갈등이 해소되길 간절히 바라며, 농협은 조합원들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조합원들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기를 바란다.

/기동취재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30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함께 대형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각 시·도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정복 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강기정 감사 등 협의회 임원단과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김철수 대한적십자사회장 등이 동행했다.

강기정 시장, 산불피해지역 찾아 “일상회복 적극 협력” 시도지사협 임원단, 경북지사·행안부 장관대행 면담… 지원 논의

참석자들은 경북도청 산불현장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했다. 참석자들은 산불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빠른 복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후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했다. 이어 “중앙선1942안동역

문화광장(구 안동역) 분향소”에서 산불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산불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8일 경북·경남·울산 등 대형산불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5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기탁키로 했다. 또, 광주시지원봉사센터는 산불특별재난지역인 경남 산청군과 경북 청송군에 234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과 광주환경공단 및 광주시·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모금한 성금 600만원도 전달했다.

/박도일 기자



‘데드라인 지났다’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무더기 제적되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대거 휴학 중인 전남대·조선대학교 의대생들이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복학 신청은 소수에 그쳤다. 무더기 제적(학적 말소) 우려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지난 28일 정오까지 복학 신청 추가접수를 마쳤다. 미등록에 따른 제적 예정 통보서를 차례로 발송한다.

이달 초 올 1학기 개강일 기준 전남대 의대 전체 학생 893명 중 신입생 163명을 비롯한 196명만 등록을 마쳤다.

이후 휴학을 신청한 697명 중 수십여 명이 등록,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지만 구체적인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마감 직전 대학에서 휴학원을 인정하지 않은 미등록 휴학생은 500여 명 후반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법정 수업일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달 28일까지는 복학을 신청해도 학사일정에 문제가 없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학칙에 따라 열흘 동안 미등록 휴학생들로부터 군 복무, 질병 등 합당한 미등록

올 1학기 등록 마감일 지났지만 수백명 씩 등록 안한 듯 전남대 ‘미등록 제적’ 통보 시작… 조선대 31일 대책 논의

이유가 있는지 제적 이의 신청을 받는 다.

실제 제적 처리는 다음 달 중순 무렵 이뤄질 전망이다 수백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조선대 의대도 올 1학기 등록 마감 기한을 지난 28일 자정까지 연장했지만 복학 신청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았다.

조선대 의대에 학적을 둔 학생 878명 중 680여 명은 휴학 상태다. 당초 신입생을 비롯한 총 189명이 1학기 등록을 마쳤지만 추가 등록기간 중에는 휴학생 중 수십여 명이 복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감 직전까지 전체 등록 비율 자체는 높지 않아 대학 측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오는 31일 향후 미등록 휴학생에 대한 제적 절차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내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의대생 수백명씩 대규모 제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정부와 각 대학들은 올 1학기부터는 학사 유연화 등 특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복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더는 대규모 학사 유연화를 하기는 어렵다. 미등록 제적 통보 학생에 대한 별도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대학마다 학칙에 따라 조치된다”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교수진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휴학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복학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학생 보호와 학사 모를 향후 해법 도출을 위해 구체적인 복학 현황은 공개하기 어렵다. 다만 현 방침대로 별다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전례 없는 무더기 제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광주시,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 총력 신청서 제출… 현장실사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선정

광주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개최 장소,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장점, 개최 효과 등을 담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앞서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엑스포 유치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행사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 모객 지원,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

한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전체 동 주민자치회 100% 전환, 시민 중심 정책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를 통해 광주의 지방자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장예인)양궁 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등 큰 축제가 줄지어 열리고, 숙박·교통 할인 혜택과 관광상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지방시대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시너지 효과를 낼 전망이다. /전광훈 기자

